

법령 제·개정 동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1311호, 2026.1.22., 일부개정(1.21 제정)]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사. (생략)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26.]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2. (좌동)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4~7. (좌동) ②~③ (생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2026.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호]

[개정이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구체화(안 제22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업무의 위탁 규정 현행화(안 제25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신 설>	제22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업무 1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2호, 2025.1.21., 타법개정]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2조).
- 라.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지원,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0조 및 제37조).
- 바. 정부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등에게 수출진흥을 위한 재정적·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1월은 ITS와 자율주행, AI 기반 교통·안전 기술이 제도와 산업, 도시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교통 혁신이 가시화된 달이었다. 국내에서는 ITS 산업의 독립적 분류 확정과 함께 자율주행·스마트 교통·AI 공공안전 서비스가 본격 추진됐고, 해외에서도 교통 투자 확대와 신기술 경쟁, 국제 전시·시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를 둘러싼 글로벌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내 토픽

지능형교통산업, '산업 특수분류' 최종 확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고시함에 따라 ITS 산업이 국가통계상 독립된 산업 분류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분류는 기존 표준산업분류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ITS 산업을 △공사업 △장비·기기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및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및 지원서비스업 등 4개 대분류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규모와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R&D·해외진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신문, 2026.1.6.)

부산항만공사, AI·자동화로 '스마트 항만' 전환 가속

부산항이 인공지능(AI)과 무인 자동화 기술을 앞세워 항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마트 항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설비 자동화를 넘어 장비가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화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동하는 지능형 물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 선박·항만장비 제어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운영 기술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술 국산화와 글로벌 표준 선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플리뉴스, 2026.2.4.)

자율주행 시범도시 광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필요

광주시가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에 따라 차량 200대 도심 운행을 예고했으나, 기존 C-ITS 인프라의 낮은 활용도와 차량 센서만으로는 사각지대 및 악천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부족한 인지 능력을 도로 인프라가 보완하는 '협력형 자율주행(C-ITS 기반 V2X)' 체계의 조속한 고도화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인프라를 LTE/C-V2X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실증 차량에 단말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앞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1, 2026.2.3.)

한국판 '샌프란' 꿈꾸는 광주, 자율주행 상용화 3대 변수는

정부는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예산 622억원을 투입해 무인차량 200대를 도심에 적용하고 실제 교통 데이터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다만, 자율차는 도심에서 많이 달릴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여서 단발 실증이나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된 테스트만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 힘들고, 기술·데이터·도시 생태계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2026.1.19.)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AI 성능 향상을 위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6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개인정보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전환을 대비한 법적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6.1.23.)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도입' 부산시설공단, 2025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부산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광안대교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최초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면제·감면 차량을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90만 대 차량을 증빙서류 없이 처리해 통행 속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 시민 편의 증진 성과를 거뒀다. (부산일보, 2026.1.26.)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경찰청은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이 장비는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해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내며, 구매·운영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2026년 고속도로 노후 무인단속장비 교체 시 해당 장비를 적용하고, 설치 기준 강화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보도자료, 2026.1.28.)

충남 소방본부, 재난 대응 서비스 'AI 기반 차세대 119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충남소방본부는 재난 안전 솔루션 기업 유니텍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달 중순부터 도민 대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AI 콜봇이 24시간 신고를 접수해 긴급도를 분석·우선 표출하고, 자동 요약·추천 질의·중복 및 비긴급 신고 분산 처리 기능을 통해 신고 폭주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공모사업’에 전국 소방본부 가운데 처음 선정돼 추진됐으며, 유니텍이 약 10억 원 규모의 개발 용역을 수행해 최대 40채널 동시 접수가 가능한 체계를 구현했다. (전자신문, 2026.1.28.)

김용석 대광위원장, 국민 체감형 교통기술 개발 강조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열차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시설·차량 자동 유지보수 등 광역교통 혁신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 향상 등 국민 체감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이트프리 결제시스템·열차자율주행·하이퍼튜브 실험실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철도연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일상을 혁신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29.)

"퀵" 교통사고 그 순간..AI가 0.1초만에 움직였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주도로 스마트폰 센서와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교통사고를 자동 감지하고, 경찰·소방·도로공사 및 후방 차량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PASS 앱이나 차량용 SOS 단말기로 운영되며, 사고와 블랙아이스 등 도로 위험을 0.1~3초 내 감지해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을 3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26.2.1.)

경주 '교통사고 위험도시' 오명 벗어나..5년 새 사고 43% 급감

경주시는 2026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통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도입과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크게 줄었으며,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고령자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일보, 2026.2.1.)

쏘카 "렌터카가 움직이는 전력망 된다"

(주)쏘카는 제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해 활용하는 '전기차 V2G(Vehicle to Grid)'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렌터카 전기차의 전력 시장 참여와 양방향 충전·방전을 허용받아, 전기차를 이동 수단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쏘카는 제주 '쏘카터미널'에 양방향 충전기 15기를 설치하고 아이오닉 9, EV9 등을 투입해 운영 데이터 분석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며, 향후 충전기를 최대 200기까지 확대해 전기차 기반 에너지 자원화와 V2G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26.1.6.)

현대차 모셔널, 연내 미서 레벨4 무인 택시 상용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AE 기준 레벨4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모셔널은 2018년부터 라스베이거스, LA, 싱가포르 등에서 시범 운영과 라이드헤일링·배달 서비스 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연말 상용화에 앞서 올해 초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자 동승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동시에 인지·판단·제어를 통합하는 머신러닝 기반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구조로 기술 전환을 추진하며, 안전성과 주행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딜사이트경제, 2026.1.12.)

교통안전도시 인천시, 수치로 입증됐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교통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수치로 입증했다. 인천시의 올해 점수는 84.83점으로 전년 대비 1.77점 상승하며 전국 평균인 81.34점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자치구 평가에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가 전국 1~3위를 휩쓸며 6년 연속 기초자치구 부문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성과를 시민과 지자체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도시 구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6.2.4.)

강원도, 교통 관련 예산 541억원 투입... '도민 이동권'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긴 이동 거리를 고려해 올해 교통복지 예산을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한 541억 원으로 편성하며 도민 이동권 강화에 나선다. 핵심 사업으로는 법정 대수를 상회하는 특별교통수단 274대 운영과 노후 저상버스 110대 교체, 그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 사업을 828개 마을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K-패스의 전 사·군 확대 및 정액형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및 주차 환경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6.2.4.)

해외 토픽

뉴욕시, 거리의 역할 재정의...버스·자전거 중심 교통정책 추진

뉴욕시 신임 교통국장 마이크 플린은 도로를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 공간으로 재정의하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린 국장은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과거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브롱크스 포덤로드와 트레먼트 애비뉴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른 절차 보안을 거쳐 기존 설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 성과를 '설치 거리'가 아닌 버스 속도 개선, 자전거·보행 이용 증가 등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pectrum News NY1, 2026.1.12.)

ANPR을 무력화 하는 '고스트 번호판' 증가세

영국에서 단속 카메라를 회피하기 위해 적외선 반사를 왜곡한 이른바 '고스트 번호판(Ghost Plates)'이 확산되면서 도로 안전과 범죄 대응 측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스트 번호판은 육안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ANPR 카메라 인식을 회피하도록 불법 개조된 번호판으로, 영국 노동당 사라 콤브스 하원의원은 지역 경찰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MAV Systems는 AI 기반 ANPR 기술을 활용해 고스트 번호판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에서는 과속 위반과 함께 단속 회피 목적 번호판 사용에 대한 추가 처벌과 번호판 공급 규제 강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ITS International, 2026.1.15.)

인터트래픽 암스테르담 2026: 수상 후보 명단 공개

Intertraffic Amsterdam 2026을 앞두고 Intertraffic Awards 2026 최종 후보가 발표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Green Globe Award △사용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보는 User Experience Award △차세대 교통·모빌리티 기술을 조명하는 Inspiration Award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 교통 관리, AI 기반 단속·번호판 인식, 광섬유 교통 감지, 주차·교통 운영 플랫폼 등 다양한 ITS 기술이 후보에 올랐다. 최종 수상작은 2026년 3월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Intertraffic Amsterdam 2026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ITS International, 2026.1.16.)

튀르키예, 2026년 공공투자에서 교통·통신 최우선

튀르키예 정부는 2026년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조 9,200억 리라를 1만 3,887개 사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교통·통신 부문에 가장 큰 비중인 26.5%를 배정했다. 철도 분야에 중점 투자해 고속·고급 철도와 국제 물류 연계 노선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과 국제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업(18%), 농업(10%), 보건(9%) 등 주요 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지진 대비를 위한 회복탄력성 사업에 6,970억 리라를 배정해 인프라 안전과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Daily News, 2026.1.16.)

ERTICO와 ITF-OECD, 협력 관계 강화 추진

에르티코(ERTICO-ITS Europe)와 국제교통포럼(ITF-OECD)은 글로벌 교통 정책 강화와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 보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공동 탐색, 최신 ITS 트렌드 공유, 연구 기여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정책과 혁신 기술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F의 글로벌 정책 관점과 에르티코의 민관 협력 생태계 및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의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방침이다. (ITS International, 2026.1.21.)

영국 교통부, 3,000만 파운드 Adept 도로 탈탄소화 프로그램 연장

영국 교통부(DfT)가 지방 도로 인프라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3,000만 파운드 규모의 'ADEPT Live Labs 2'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30만 파운드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연장을 통해 각 지방 의회는 도로 유지보수에 저탄소·고내구성 소재를 활용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로 수선 주기를 줄이고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향후 1년간 7개 참여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혁신 사례와 자원들을 도로 교통 분야 전반에 공유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ITS International, 2026.1.21.)

캡쉬, 뉴욕주 교통 관리 역할 확대

캡쉬 트래픽컴(Kapsch TrafficCom)은 뉴욕주 교통부와 6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틀카와 빙햄턴 지역의 교통관리센터(TMC) 두 곳을 추가로 운영하며 뉴욕주 내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로써 캡쉬는 뉴욕주 전체 11개 TMC 중 4곳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와 도로 공사 등 잠재적 위험 정보를 운전자와 관계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기본 3년에 2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캡쉬는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총 8개의 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ITS International, 2026.1.26.)

웨이모, 160억 달러 투자 유치로 자율주행 가속 페달 밟는다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가 최근 16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를 1,26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웨이모는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포함한 미국 내 주요 도시와 런던, 도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1억 2,700만 마일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 운전자 대비 부상 사고율을 90% 낮췄다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ROBOT REPORT, 2026.2.3.)

공공발주 및 R&D·정부지원 통합 공고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용역), NTIS(R&D), 기업마당(지원사업) 등 유관 시스템의 공고를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1.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차세대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해양수산부	90,000,000	2026. 02. 10.
일반용역	국토교통 분야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가공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80,000,000	2026. 02. 10.
기술용역	2026년 통신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남부도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352,484,000	2026. 02. 10.
일반용역	2026~2027년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경기도	5,011,826,000	2026. 02. 23.
일반용역	국토교통 ODA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감리용역	해외건설협회	165,000,000	2026. 02. 27.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긴급]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연계 및 교통관리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본사	140,880,000	2026. 02. 24.

국가 R&D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추진 사업	정부부처	사업비	신청마감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중소벤처기업부	1,049억원	2026. 03. 03.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R&D)	경찰청	682억원	~ 2026. 03.
K-C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국토교통부	45억원 이내	2026. 03. 17.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산업통상부	10.71억원	2026. 03. 03.
2026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억원 이내	2026. 02. 23.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연계 및 교통관리 활용방안 연구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연계 및 교통관리 활용방안 연구 용역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 사업예산 : 140,88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자율주행 실현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고속도로 쉐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 화물차의 간선 물류운송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시대 도래
- ◎ 이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교통관리·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과업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전국 고속도로 및 일부 연결도로 포함(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구간)
- ◎ (내용적 범위) 자율주행차 데이터 연계·활용 현황 및 사례 조사, 교통관리 필요 자율주행차 데이터 목록 도출 및 활용방안 연구,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단계적 고속도로 교통관리 전략 수립

주요내용

- ◎ 자율주행차 생성 데이터 종류 및 현황 조사
- ◎ 국내외 자율주행차 관제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현황 조사
- ◎ 국내외 자율주행차 생성 데이터 교통관리 활용방안 사례 조사
- ◎ 고속도로 교통관리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목록 도출
- ◎ 연계 필요 데이터의 교통관리 활용방안 연구
- ◎ 자율주행차 데이터 연계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문의처

- ◎ 교통처 모빌리티부 (054-811-2674)

차세대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차세대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 까지
- ◎ 사업예산 : 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추진 배경

- ◎ ISM 결함이 출항정지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 식별되는 등 선박 안전 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첨단 해양용 항공기체 및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상용화를 지원하는 新 선박안전관리 체제 검토

세부 사업 수행 내용

- ◎ 수요자(안전관리대행업체 등) 중심의 안전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시심사 등 안전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자율운항선박 및 원격운항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체계 방안 연구
- ◎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지원이 미흡한 선주, 화주 등에 대한 추적 관리 및 항만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 첨단 항공기체 등 차세대 해상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空-海 입체적 해상교통체계 구축방안 제시
- ◎ ISM Code 관련 국제회의 동향 파악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계(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적용지침) 효율화 방안 연구
- ◎ 화학제품운반 분야 등 선-화주 안전 협의체(간담회 등) 지원

문의처

- ◎ 과업내용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51-773-5819)
- ◎ 입찰·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국토교통 분야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가공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일반사항

- ◎ 사업명 : 국토교통 분야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가공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 ◎ 사업예산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내역사업

- ◎ 국토교통 분야에서 AI 기반 정책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확대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수요 증대
- ◎ 국토교통 분야의 서비스는 신호 및 도로운영과 인프라 유지관리 등 실시간의 운전자 행태 및 도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학습 및 대응 필요
- ◎ 정형·반정형·비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 이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용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AI 기초모델 구축 전략 수립 필요

세부내용

- ◎ 대내외 기술 및 정책 환경 분석
- ◎ 국토교통 학습용 데이터 가공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 국토교통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전략 수립
- ◎ 실증 및 확산 방안 수립

관련 웹사이트

- ◎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044-201-3279)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목적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R&D 지원

신규사업 및 공모일정

구분	내역사업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자원유형	품목지정	
자원목표	157개 과제 내외	149개 과제 내외
자원규모 (규모 기준)	577.4억원	156.9억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24개월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지원한도	최대 7억원/연	최대 2억원/연
지원체계	중소기업(주관) + 중소기업(공동) + 대학(공동 또는 위탁) +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 또는 위탁)

관련 사이트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2026년 경찰청 신규 사업(R&D)

사업목적

- ◎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과학치안을 구현하여 국민의 안전과 현장 법 집행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 치안 AX(AI 전환) 가속화와 R&D 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치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치안 강국으로의 도약

신규사업 및 공모일정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기간	과제수	예산(억)		사업공모	사업착수	
					총	'26년			
'26년 신규 사업	사회적 약자 밀착형 디지털 순찰 서비스 개발		'26~29 (45개월)	1개	63.46	10.11	1월	4월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26~29 (45개월)	2개	100.01	20	1월	4월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26~28 (33개월)	1개	132	36	1월	4월	
	다중어레이 복합센서 기반 마약탐지 및 은닉 위치 추론 시시스템		'26~29 (45개월)	1개	71.5	15	1월	4월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컴퓨팅 기술개발		'26~29 (45개월)	1개	75	15	1월	4월	
과제형 사업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26~27 (21개월)	2개	과제당 9.3	과제당 4	1월	4월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융합탐색)		단년 (12개월)	10개	과제당 0.8		1월	4월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핵심원천)		'26~28 (30개월)	4개	과제당 8.25	과제당 2.25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플라츠랩3.0)	사전검증연구		단년 (3개월)	12개	과제당 0.5		1월	3월
		현장 적용 R&D (본연구)	현안대응	'26~28 (30개월)	3개	과제당 10	과제당 2	4월	7월
			신속시범	'26~27 (18개월)	3개	과제당 9	과제당 3		
	국제협력		'26~29 (42개월)	1개	과제당 28	과제당 4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치안 R&D 사업화)		'26~27 (21개월)	3개	과제당 5.25	과제당 2.25	1월	4월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공공(치안) 기술이전 사업화)		'26~27 (21개월)	4개	과제당 5.25	과제당 2.25				

관련 사이트

- ◎ 과학치안진흥센터(<https://kipot.or.kr/>)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사업목적

- ◎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 ◎ AI 기반 융합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구분	지원 규모	주요 지원 내용	접수기한
계획 수립형	3건 내외 (건당 7억 내외)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지원	연중 상시 접수
해외실증형	6건 이내 (건당 4억 내외)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 및 검증하는 시범사업 지원	2026. 3. 17.

공모일정

- ◎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여 '27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
- ◎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

관련 사이트

-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 ◎ K-City 네트워크 누리집(www.kcitynetwork.go.kr)

공모 세부내용




「2026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공모

K-City Network 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도시형 맞춤형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에게는 도시문제해결과 경제발전을, 우리기업에게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유형

1 계획 수립형 사업

스마트 도시계획 & 스마트 솔루션 계획

- ▶ 지원규모 : 3건
- ▶ 지원금액 : 4~7억원
- ▶ 신청주체 : 해외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 ▶ 접수기간 : 연중('26) 상시

2 해외 실증형 사업

스마트 솔루션 실증

- ▶ 지원규모 : 6건 이내
- ▶ 지원금액 : 3~4억원
- ▶ 신청주체 : 국내기업기관 (해외정부 컨소시엄)
- ▶ 접수기간 : '26.2.6~'26.3.17

추진일정

공고/G2G협력

사전 컨설팅

사업 선정

사업수행자 입찰공고

사업용역 계약체결

사업 수행

연중('26) 상시접수

연중('26) 상시수행

'27.1월

'27.1분기

'27.1분기

약 9개월

사업설명회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서면평가, 발표평가

사업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수행

'26.2.5

'26.2.6

'26.3.17

'26.4월 중

'26.4월 말

'26.4~12월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26.2.5 (목) 14:00~15:00 / 온라인 영상 회의 (참여방법: 공고문 참조)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및 제출처

계획 수립형 사업

스마트 도시계획 & 스마트 솔루션 계획

문의 및 제출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협력실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운영사무국

전화 +82-2-6746-7410, +82-2-6746-7418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해외 실증형 사업

스마트 솔루션 실증

문의 및 제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운영사무국

전화 +82-31-389-6359, +82-31-389-6409
이메일 kcitysolution@kaia.re.kr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cti.go.kr)과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www.kcitynetwork.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목적

- ◎ 자율주행, 차세대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
-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

공고개요

- ◎ 공고기간 : '26.1.29(목) ~ 3.3(화) 18:00
- ◎ 지원예산/기간 : 10.71억원 / 12개월

공고과제

No	연구개발과제명	지원규모 (백만원)
1	모빌리티 분야 AI 오작동 대응을 위한 신뢰성·안전성 시험·검증 서비스 개발	161
2	AI 기반 HCL조명시스템의 측정 시험 서비스 개발	161
3	AI 데이터품질·프로세스·거버넌스 통합 시험 서비스 개발	161
4	이차전지 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험 기반 구축	133
5	유전자 증폭 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기반 구축	133
6	유럽연합 PPWR 대응 식품포장재(종이) PFAS 고감도 시험 서비스 개발	161
7	USB-C 전력 전송 분야 IEC 62680 기반 시험 서비스 개발	161

문의처

-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 문의 : 엔지니어링/표준실(053-718-8268)

2026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사업목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 SW 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매출·고용·수출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 SW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

접수기간 및 예산

- ◎ 접수기간 : '26.1.23(금) ~ 2.23(화) 15:00
- ◎ 지원예산/기간 : 10.71억원 / 12개월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율과제 이행자금	성장목표 및 이행과제를 사업금액 내에서 자율 설계(지원기업)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글로벌 성장 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성장 지원단(고성장PD)을 통해 기업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춤형 멘토링 제공(필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성장 인센티브 지원
	예비·고성장기업들에게 정보 교류,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상호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지원자격

구분	세부내용
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값) 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3년~2025년 연말
수출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종사자 2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수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3년~2025년 연말

관련 사이트

- ◎ SW고성장클럽(<https://swgo.kr/>)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s://www.nipa.kr/home/2-2#>)

ITSK NEWS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ITS 전문인재 양성 본격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2026년을 맞아 첨단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AI 기반 교통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ITS 전문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교통·ITS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교육과 산업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산업맞춤형-전략분야) 사업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AI 등 신기술을 교통·ITS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26년에는 총 55개 교육과정, 57회 교육을 통해 761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하이테크형-산업전환)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첨단 모빌리티 분야로의 신규 진입 기업과 기술 고도화·사업 확장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자율주행·모빌리티 전문 교육 28개 과정, 31회 교육을 통해 5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지능형교통(ITS) 산업, 국가통계개발 지원과제 최종 선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ITS 산업이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ITS 산업은 객관적 지표를 갖춘 국가 승인통계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ITS 산업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 개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산업 규모·기업 분포·인력·연구개발·해외진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산업통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본 과제는 기존에 개별 산업으로 분산·집계되던 ITS 관련 통계를 통합·정비하여,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수출 지원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조사체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ITS 산업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가통계개발 지원과제 선정은 ITS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책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